

데스크시각

김주정



광주시가 추진 중인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이 벽에 부딪혔다. 백화점, 마트 등 대형 유통점들이 지역제품 매장을 늘리고, 매장 수수료를 내려달라는 시의 요청을 사실상 묵살했다고 한다. 광주에서 연간 1조 원 상당의 상품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이렇 수 있는 나라는 비단이 거세다.

일자리 만들기·지역제품 사주기 등을 경제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광주 시로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트 천국'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27개나 되는 대형 유통점을 허가해 온 '유통점 친화 정책'이 무색한 상황이다.

팔기만 하는 압제 상흔

유통점들도 할 말은 있다. 경제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제품 사주기는 제1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3개 대형 유통점 관계자들은 "지역제

품 가운데 우수 제품이 별로 없고, 광주에서만 수수료를 내릴 수 없다"며 광주시의 우수지역제품 발굴·육성 제안을 외면했다. 자신들은 판매 조직이 뿐 구매는 본사가 한다는 광계도 됐다. 지역 경제를 살리

겠다는 지자체의 의지가 '나부터 살고 봐야 한다'는 기업의 논리에 가로 막힌 형국이다. 대형 유통점만이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의 앞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운동의 주체인 지자체도 열의가 떨어진다. 광주 시만해도 여태까지 대형 유통점의 구매실

태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선 정도다. 지자체 스스로 알만큼 구매하고 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삼성 등 지역 거진 메이커들은

"지자체나 교육청 등 관공서에 가서 지역 생산품이니 사달라고 했다가 면박당하기 일쑤"라고 하소연한다. 겉으로는 지역제품 사주기를 외치면서 실제 구매할 때는 '국가계약법'의 뒤로 숨어 경쟁을 부린다. 로비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입찰해야 한다는 '참 쉬운' 논리다. 그렇다면, 현재 각급 지자체에서 수도 없이 잘게 쪼개져 발주되고 있는 각종 수의계약 공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역사회도 반성할 대목이 있다. 지역 제품을 사취하 지역기업이 잘 돼서 지역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주민이 압박해야 지역제품 사주기가 선거 때만 나오는 공약에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 유통점들도 "팔 물건이 없다"며 떠날 일이 줄게 된다. 일자리는 하나라도 더 생긴다.

너무나도 개방적인 광주

금융사나 대기업들이 최근 수년간 지역 본부의 역할을 대폭 줄인 것도 문제다. 조직을 슬림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본부가 그 고장 제품 사주거나 불우이웃 돕기 등 이익의 지역 사회 환원 기능은 약해졌다. 실제로 지역 사회 복지기관들은 이들의 도움이 예전보다 20~30%나 줄었다고 말한다.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주민이 압박해야 지역제품 사주기가 선거 때만 나오는 공약에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 유통점들도 "팔 물건이 없다"며 떠날 일이 줄게 된다. 일자리는 하나라도 더 생긴다.

<경제부장> jnews@kwangju.co.kr

시설

광주천 '물 도둑' 보고만 있을 건가

광주천 물이 도둑맞고 있는 모양이다. 광주지역 일부 하수도 공사 업체들이 하수도 준설이나 청소로 필요한 물을 광주천에서 빼내 물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가뭄으로 인근 저수지가 메마르자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가까운 광주천에서 매일 수씩 하천물을 펌프로 끌어올리고 있다. 광주 시민들의 물을 마치 자신들의 것 인양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광주천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산강 홍수통제소에 사용량만큼 수수료 를 내야한다. 그런데 이들은 수수료가 아까워 유수 사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물을 끌어다 쓰고 있다. 한 업체의 경우 매일 8 정도의 물을 광주천에서 빼내 하수도 준설에 쓰고 있다. 다른 업체들은 가뭄으로 인해 말라 버린 저수지 보다 접근이 쉬운 광주천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물이 수 십에 이른다. 우리는 이들 업체들의 불성실한 소행

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천인 광주천의 수위를 높이는 데 애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656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들 '암채도둑'들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광주시와 해당 자치구가 전회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체도 아니고 여러 업체가, 그것도 수십에 이르는 물이 유출되는 데도 모르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데만 열중할 뿐 정작 관리감독에는 소홀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해당 자치구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이들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광주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다시는 물 도둑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야 되겠는가.

경기회복 '불씨' 살리는데 만전 기해야

소비심리지수가 1년여 만에 기준치인 100을 넘어섰다고 한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미미하게나마 플러스로 돌아섰다. 인위적인 부양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나라 안팎에서 대형 악재가 동시에발적으로 발생해 모처럼만에 살아난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무엇보다 한 반도 긴장 고조가 경제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 실험에 이은 잇따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선언 등으로 남북 간 긴장 개성공단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국가신인도가 약화돼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내부요인보다는 외부변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가 사회통합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립양상으로 번질 경우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게다가 노동계의 하부(夏圖)도 심상찮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국내 경제가 내외위환(內憂外患)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 어떤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치밀한 노력도 따라야 한다. 특히 모든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에 적극 나서 내부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편중정책을 펴서는 국가신인도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내외적 변수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유연한 대응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듀크대의 '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듀크대가 수년전 546명의 남녀에게 4주간 쌀밥을 먹게 한 뒤 몸무게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평균 8.6kg, 남성은 13.6kg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실험결과, 비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이후 듀크대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해서 아침까지 거르는 여성들을 주위에서 자주 대한다. 쌀의 진가를 모르는 여성들의 얘기다. 듀크대학의 실험결과가 아니더라도, 밥은 살찌는 음식이 아니다. 쌀에 포함된 당질은 에너지 소비에 우선 사용되기 때문에 비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체지방 합성을 촉진하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 되레 비만에방에 도움을 준다.

세 끼를 밥으로 먹으면서 채식위주의 반찬을 섭취할 경우 그 칼로리는 1천 800kcal에 불과하다. 이는 성인의 하루에너지 필요량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뿐 아니다. 쌀은 탄수화물·단백질·무기질 등을 고루 함유해 대장암·치매·노화를 방지하고, 지구력 증진에도 좋은 '완전 식품'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쌀이 외면받고 있다. 인스턴트 식품에 밀려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매년 육은쌀이 급증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전 남지역 쌀 판매량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재고량은 무려 45%에 달했다.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 또한 줄어든다.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현실은 농민들을 또 거리로 내몰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쌀의 영양과 기능성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확대를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쌀밥 먹기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백강화



또 한번 광주의 핏빛 5·18이 왔다. 그런데 5·18은 정말 광주만의 기억일까? 아니 광주만의 기억도 되지 못하는 것일까? 오후에 아이들 교육이 좀 되려나 싶어서 5·18 묘역에 가 보았다. 그레도 5·18인데 제법 사람들이 붐비고 볼거리도 좀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웬걸, 그날 오후의 묘역은 평소 썰렁함 바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정말 오늘이 5·18 맞나 확인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런 날도, 누구를 비평하거나 닦할 하등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만일 이런 상황을 비평할 만한

다면, 보전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는 게 옳은 일 같다. 한번 부순 건물은 다시 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빨판을 보존하는 것에 의미를 찾자면 사실 여러 가지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바라만 보아도 상처가 되는 아우슈비츠나 서대문형무소를 보존하는 까닭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역사는 아픈 진실을 새기기 위해서다. 새 문화의 전당이 어떤 의미에서 세워지건 그 건물에서 5·18을 찾는 이는 거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 이외도 건축학적인

텅 빈 오월 광주

광주시민의 자락을 갖춘 이들이 있다면 여기 무덤 속에 잠든 영혼들. 그리고 굳이 더 찾자면 그때 부상당하신 분들이나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온 유족들 일 것이다. 나머지는 그저 죽은 자에 대한 미안함과 가해자에 대한 증오를 가슴 속에 꼭꼭 묻어둔 채 해년마다 조심스럽게 무덤을 기웃거리는 나 정도의 사람들 뿐이다.

그러나 요즘 기류들 보니 그 자격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작은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정말 아픔과 슬픔을 서로 나누어도 모자랄 분들인데 저러다 금방 다시 보듬고 좋아지시겠지 하고 지켜보았지만, 5·18 다 지나도록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광주의 소시민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 논쟁의 핵심 내용이 '도청별관을 존치하느냐 없애느냐'로 모아 지는 것 같다. 혹시라도 누가 설문지라도 내민다면 내 의견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별관을 진정으로 사당하여 존치를 주장한

로도 신구의 조화, 아픔과 기쁨, 기념탑의 역할 등 잘만 포장한다면 충분히 문화의 전당을 오히려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번 5·18에는 늘 오시던 대통령도 오지 않으셨다니 좀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 아니 어쩌면 차라리 5·18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의례 것 오시는 분들이라든 차라리 안 오시는 게 오히려 영혼들에게는 더 나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5·18을 우리 광주시민 부터 챙기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다면 이젠 그 어떤 타인도 5·18을 대신 축하 해 주거나 자랑스러워 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때의 서로 주먹밥 챙겨주고 광주를 스스로 보호해 주던 그 '대통령산' 지금 우리 광주에게 너무도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싶다. 다음 5·18 때는 묘역에서도 거리에서도 그 누구도 아닌 활기차고 밝은 광주시민들로 무한 넘쳐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주부>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고아 수출'이라는 표현 쓰지 말았으면

5월11일은 네 번째 맞는 '입양의 날'이었다. 6·25 전란 후 전쟁고아와 혼혈아 대책의 하나로 시작된 입양사업이 대한민국을 '고아 입양 최다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요즘엔 미혼모와 가정해체에 따른 아동 방치가 고아를 더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 2007년에 사상 처음으로 국내 입양이 해외 입양을 추월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 있어 아쉽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부 언론에서 해외입양을 '고아

수출', '고아 수출국'이라는 식으로 함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이라면 상품, 서비스 등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에서 받아주지 못한 아동을 안타깝게 외국으로 내보내 것도 가슴이 아픈데, 경제용어까지 써가며 매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럼 입양을 하는 외국인 부모들은 아이들을 구입하는 수입업자란 말인가. 언론에서는 이들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표현을 꼭 고쳐주길 부탁한다.

▲이학섭·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기고

김용갑



작금의 영산강 뱃길복원에 대한 추진 상황은 어디쯤 와 있는가? 영산강 뱃길은 어떻게 열릴 것인가? 영산강변에 사는 많은 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은 모이면 요즈음의 화두가 아닐는지 생각한다. 영산강 뱃길을 복원한다니까 어렵히 알아서 복원해야 해주겠지만 지난해 12월에 둔치에서 요란하게 착공식을 한 뒤로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전담도나 나누시도 어떻게 복원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나 연구, 주민여론 청취, 영산강 뱃길 복원

김정호의 대응여지도에도 영산강의 하상 깊이를 3장(9m) 조일 시(물밀 때) 4장(12m) 이라고 기록되어있어 평균 10m정도는 될 것이라고 추측된다 지금의 영산강은 토사와 오염의 퇴적물이 쌓이고 썩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의 수심은 못되어도 6m이상 되어야 말뿐인 영산강 뱃길복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류가 오고가는 영산강 항구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옛날의 영산강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일부 환경 논쟁자 몇몇 행정가들은 강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강의

영산강의 아침

진행발표 등을 자주 해 좋은 안을 도출해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발 빠르게 행정이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까?

영산강 주변에 사는 220만 주민들은 1조 5천여억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영산강에 2011년까지 투입되어 사업을 벌 의미는 느끼지 못하면서 의례 것 오시는 분들이라든 차라리 안 오시는 게 오히려 영혼들에게는 더 나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영산강에 뱃길이 열리려면 얼마의 길이로 파괴 혹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관 광선은 띄워 지는가 물류는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인가 재난대비는 어떻게 한 단 말인가 기타 많은 점이 우리는 궁금하다. 이런 많은 의문들을 해소해 주는 것은 행정이 해야 할 막중한 일일 것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영산강이 뱃길이 왕래 되고 물류가 유통했던 30여 년 전의 영산강으로 복원되어 지길 바라는 대 일부에선 생태계복원의 하천정비 차원의 영산강 개발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영산강 뱃길에 대한 지역여론이 갈라진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수질만 개선되면 되는 양 안일한 접근을 하고 있어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 다른 4대 강과 하천인 낙동강은 내륙깊이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이번엔 하천준설, 대초벌 등 4대호 승상사업, 하구 독 통수, 제방보강, 항구터미널 건설 등을 2011년까지 완공한다는데 종합정비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알고 정치권에서도 1조 광선을 띄워 지는가 물류는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인가 재난대비는 어떻게 한 단 말인가 기타 많은 점이 우리는 궁금하다. 이런 많은 의문들을 해소해 주는 것은 행정이 해야 할 막중한 일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영산강 뱃길복원을 통해 새로운 영산강 번영의 시대가 열려 있으면 하는 희망을 안고 오늘의 영산강을 바라본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영산강에서 나왔던 맛있는 누런 황복탕 맛은 우리는 잊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국의 상해까지 가 포동지구 웨탄의 밤 야경을 보러 갈 날도 멀지 않을 것 같다. <나주시 영산강라이온스클럽 회장>

완전식품 '우유' 학교급식 의무화해야

우유는 우리가 먹는 일반 식품 중 가장 완벽한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영양학적으로도 우유는 청소년들에게 칼슘을 채워주는 필수 식품이다.

현재 일본은 이미 50년 전인 1957년 우유 유제품에 대한 수급조정대책의 일환으로 우유급식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우유급식을 확대해왔다.

그래서 모든 학생에 대해 보조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연방법으로 정해 학교에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유럽연합도 급식대상에 전유 또는 부분탈지유로 만든

백색 시유, 가공유와 요구르트가 반드시 학교 우유급식에 포함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키가 작은 자녀를 위해 성장 클리닉은 물론, 그것조차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뼈를 잔아 늘이는 수술까지 감행한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충실하게 우유를 먹었다면 이런 일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학교의 급식에 아예 우유급식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맞다고 본다. <김옥림·순천시 인제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문 화 홍 보 부 2200-661	광 고 마케팅 부 2200-521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4	여 령 체 제 부 2200-679	인 사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9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1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